

세관 수사혁신을 위한 「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」 출범

-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세관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추진
- 수사권 남용 방지,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 및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

- 관세청은 12월 9일(화)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「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」를 출범하고,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.
-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·외환·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, '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.
 -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,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
 -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, 외환범죄,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,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하에 학계·법조계·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.
 -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①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②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, 논의하였다.

□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

○ (현행) 관세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수사업무 분야에 형사소송법·수사기법 등 9개 전문 과정을 운영 중이나, 실무 수사기법 위주의 교육 비중이 높아 형법·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○ (개편)

① (교육 재설계) 전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, 신규자·경력직원·관리자 등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설계한다. 각 세관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자체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.

② (형사사례 연구) 세관별로 수사발전 연구회를 발족하여 판례 및 수사지휘사례 분석을 활성화하고,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사경 전문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사 품질을 제고한다.

③ (미래인재 양성) 첨단 수사기법, 디지털 포렌식, 가상자산 분석 등 향후 업무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, 수사업무에 관심 있는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장기교육 과정을 신설한다.

② 수사 책임성 강화

○ (현행) 특사경 관련 정책·제도의 설계가 내부 의사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,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여 대외적 신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
○ (개편)

① (자문위원회 운영) 수사 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을 위해 학계·법조계·형사 및 인권 분야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「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」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한다.

- ② (수사과정 모니터링) 본부세관별 운영 중인 「범칙조사 심의위원회」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, 수사 과정의 적법성·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을 신설한다.
- ③ (수사 지휘체계)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‘수사지휘 본부’를 구성하고, 세관 국·과장 대상 지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‘법률 전문관’ 신설과 함께 수사 품질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담보한다.

③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

- (현행)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*,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.

* 관세청 특사경 평균 수사경력 6년, 10년 이상 수사경력 비율 41.5% (24년 기준)

- (개편)

- ① (인사 운영체계) 개인별 전문성 및 경력경로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 장기근무 여건을 보장하고, 세관별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수사 자문 및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‘법률 전문관’을 둔다.
- ② (전문 자격제도) 수사 경력별 자격제도를 도입하고, 이를 수사팀장 임명 등 인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계급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.

□ 이번 위원회에서 내외부 위원들은 회의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세청의 수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,

- 세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하였다.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,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히면서,

- “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것”을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조사국 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광우 (042-481-7910)
		담당자	사무관	조흥래 (042-481-7911)

